

“지선-개헌 국민투표 무산 매우 유감”

文대통령 “개헌안, 정상회담 후 결정할 것… 취지는 제도·정책·예산 등으로 최대한 구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된 것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면 재외국민 투표권을 고려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 의견에 따른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은 지난 23일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방송법 처리, 드루킹 사건 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와 같은 상식이 아무 고민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 등으로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드린다.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달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뉴시스

최영규 “코레일·SR 통합 연구용역 발주 적극 환영”

“정부의 코레일·SR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적극 환영한다.”

24일 전라북도의원 익산4선선거구(동산동·영동1동·어양동·팔봉동) 최영규 예비후보(사진)는 “고속철도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코레일·SR 통합 연구용역 발주를 적극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영규 후보는 “지난해 전라북도의회에서 ‘코레일·SR 통합 및 전라선 SRT 신설 촉구안’을 채택한 바 있다”면서 “늦었지만 지난 정부가 일방 추진한 고속철도 경쟁정책이 시행착오를 거쳐 통합이라는 공론으로 관심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전주 등 전라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경부선과 비교해 고속열차 운행횟수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고속철도 경쟁정책으로 인해 전라선 지역 도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줬다.

이는 지난 2016년 수서발고속철도(SRT) 개통이 전북도민에게 수도권 동남부지역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걸게 해줬지만, SRT가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영규 후보는 “현재 이원화된 코레일과 SR의 서비스가 통합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지역차별 없이 자유롭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열차 이용을 할 수 있다”면서 “특히, KTX 요금 인하 효과로 이어져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남북정상회담 D-3 24일 오후 고양 킨텍스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오는 27일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평화당, 바른미래당에 비례의원 3명 출당요구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현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인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의 출당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24일 오전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만나 비례대표 출당 요청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공동대표와 보좌진들의 부재로 대표실 문이 잠겨 서한을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했다.

조 대표는 앞서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서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50대 주부 진현주씨를 위로 방문했다. 진씨가 바른미래당을 향해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의 출당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시위농성을 하고 있어서다.

조 대표는 “저희도 그분이 단식농성 하는 줄 몰랐다”며 “(진씨가) 안철수는 과거 국민의당으로 나올 때 비례대표의원을 출당시켜달라해서 합류시켰고 박주선 공동대표는 특별한 사유로 합당, 분당될 때 비례의원이 자유롭게 당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음에도, 유승민 공동대표는 비례의원을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비례 세 분을 인질로 잡고 있는 행태에 대해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안철수 전 대표가 그냥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더욱더 분노했다”며 “어떻게 이런 분이 서울시장이 되겠냐며 이런 정치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 막아야겠다고 했다”며 “(진씨는) 저희 당과 전혀 연관이 없이 단식농성을 진행한 것이다. 6일째 광화문에서 했다가 여의도로 옮겨 오늘이 13일째”라고 부연했다.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하며 현 평화당 의원들과 함께 활동을 해왔다. 합당, 분당이 된 뒤에도 이들은 바른미래당 소속이나 평화당에서 정당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 대표는 “안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합당하면서 정체성이 우리랑 전혀 다르다. 이런 여러가지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희들은 3분의 비례의원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기 위해서 여제 방문하겠다고 일정을 얘기했는데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단 출당요구서를 전달하겠다. 나머지는 국민이 판단하고 심판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이견리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견리 변호사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신임 부위원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연세대에서 법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고시 26회 출신의 이 부위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뉴시스



김관영 “스마트팜 세계가 주목… 관련 정책 시급”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팜’ 정책토론회서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군산에서 열렸다. 군산 경제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4차 산업 관련 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이 주목된다.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전북 군산)은 군산(군산대학교, 황룡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팜’을 주제로 23일 정책토론회를 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전통산업인 농업을 접목한 스마트 팜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뛰어난 IT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관련 기술 개발 및 수출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에 관련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국내에서도 관련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산업은 이미 4차산업 혁명기에 이미 전세계적으로 유망한 산업이다”면서 “뛰어난 IT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도 이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현 전북대학교 교수가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팜’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패널토론회는 손정의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남대 교수, 최기영 강원대 교수, 이주량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